

인구=시장, 그리고 우리의 미래

김 성 일

(주)KG제로인 연금연구소

명제 I: “시장 없는 인구는 있어도
인구 없는 시장은 없다”

명제 II: “저출산은 표가 없고 고령화는
표가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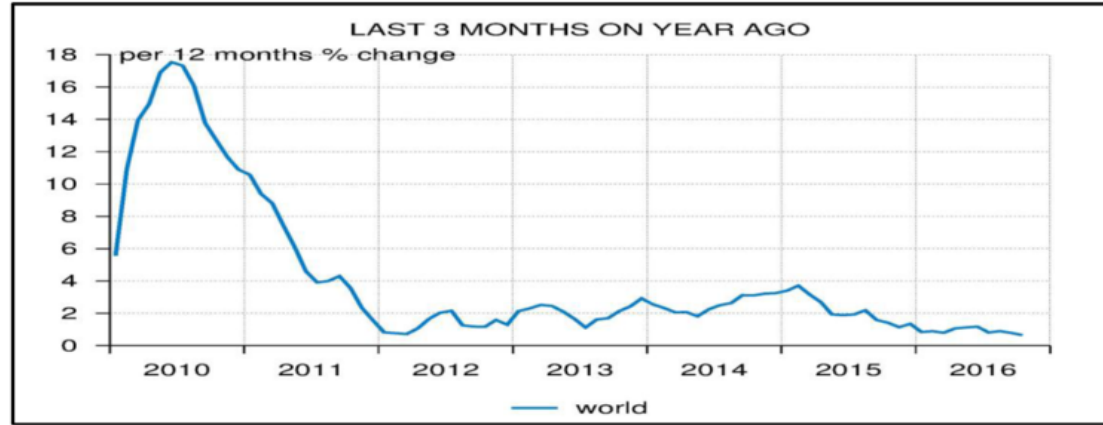
명제 III: “인구를 국가에 맞추던 시대에서
국가를 인구에 맞추는 시대로”

우리가 모르는 세계경제의 진실

1. 세계경제의 올바른 진단

세계 교역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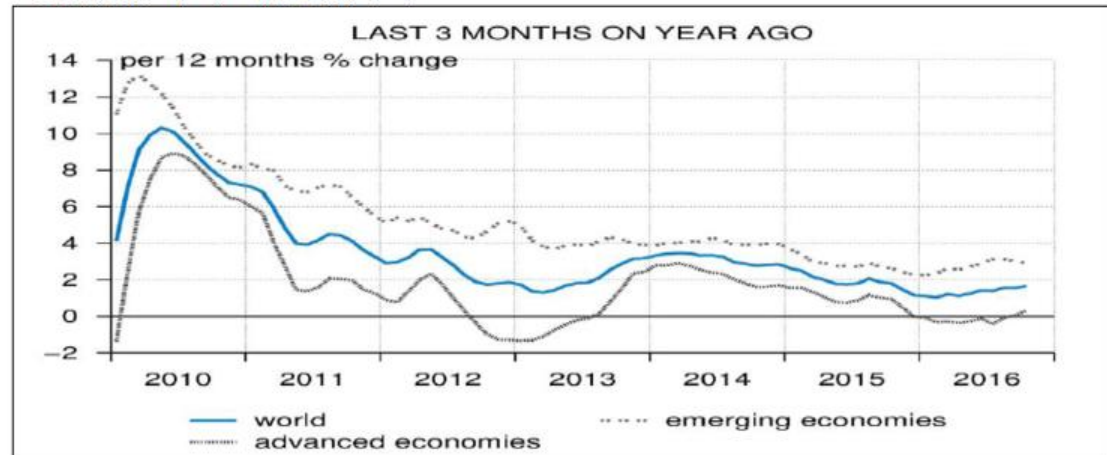
* 물동량 기준 세계 무역 규모 추이(3개월 이동 평균)



2016년 세계무역은 달러로 표시된 교역규모가 아닌 물동량 기준으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있음.

이는 교역상품의 1/3을 차지하는 자본재 교역의 둔화 때문인데 투자침체가 가장 큰 원인임.

* 산업 생산량 비교(12개월 단위) 추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경제의 진실

1. 세계경제의 올바른 진단

돈 안도는 세계경제



우리가 모르는 세계경제의 진실

무너진 세계경제 사이클

지난 20년간 경기 사이클 (경기순환변동치)

※ 경기순환변동치: 매월 취업자 수와 광공업 생산 지수, 소매 판매액 지수 등 경기와 밀접한 7개 지표를 가공해 만든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 100 아래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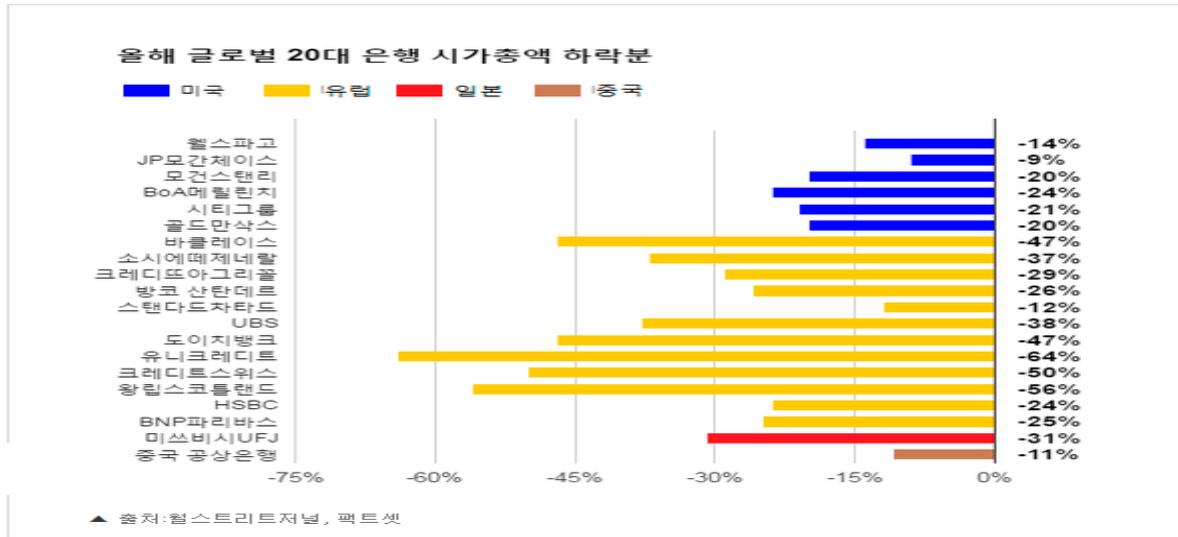


사이클 사라진 해운업 경기 전 세계 컨테이너선 하루 평균 운임



우리가 모르는 세계경제의 진실

2. 대형 은행의 몰락



조선비즈 2017년 3월 8일

마이너스 금리 정책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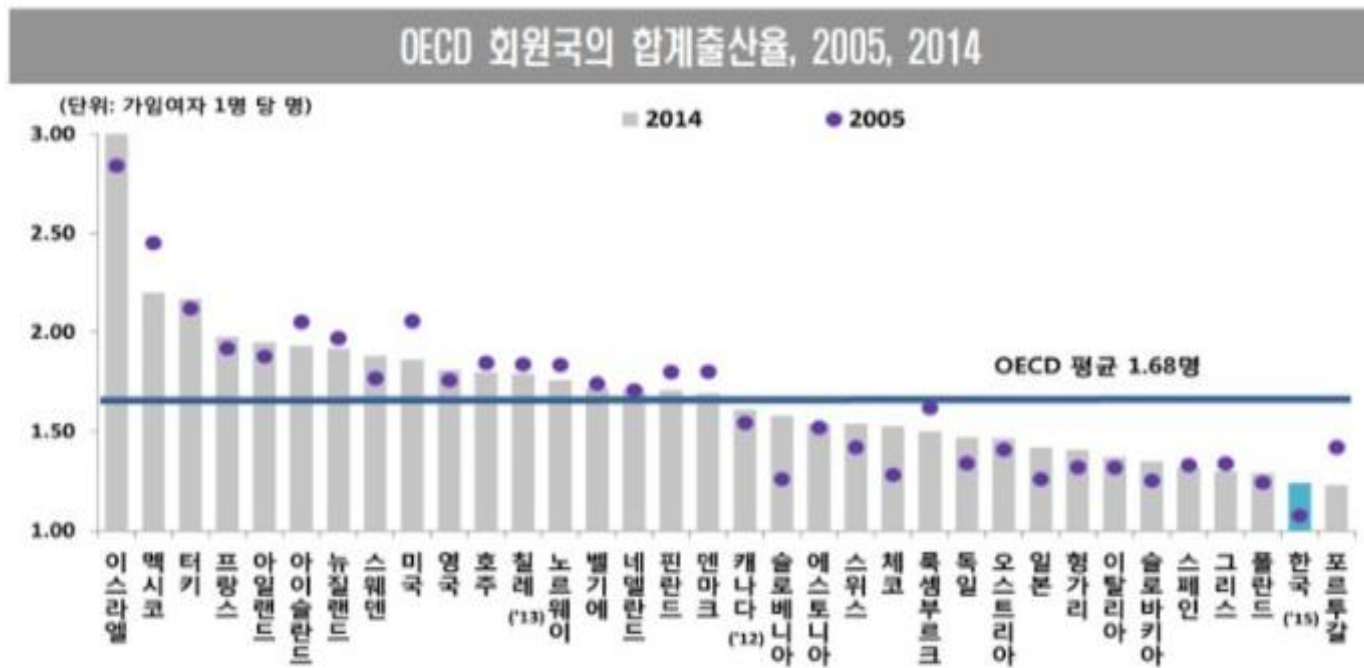
구분	덴마크	유로존(ECB)	스위스	스웨덴	일본	헝가리
도입시기	'12.7 월	'14.6 월	'14.12 월	'15.2 월	'16.1 월	16.3 월
적용대상	일부 예치금리	예치금리	기준금리	기준금리	일부 예치금리	예치금리
현재금리	-0.65%	-0.40%	-1.25%~-0.25%	-0.50%	-0.10%	-0.05%
GDP 규모 (조 달러)	0.30	16.22	0.67	0.50	4.12	0.12

자료: KICF, 삼성증권

우리가 모르는 세계경제의 진실

3. 세계경제 침체의 본질

OECD합계출산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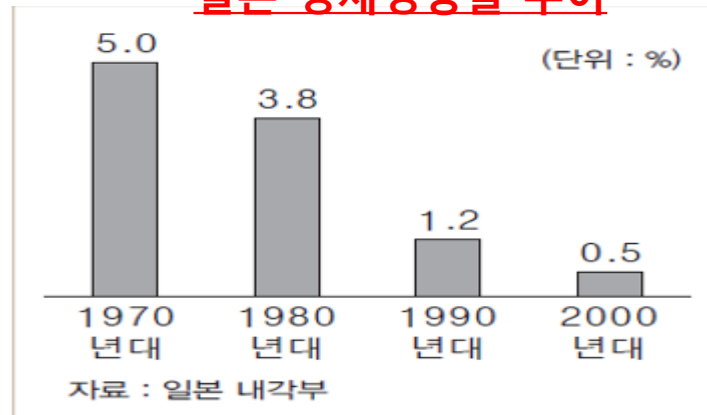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 일본

기존 인구 대체 합계 출산율: 2.1명 - 생산가능인구 축소시점 출산율: 1.51 = 0.59 : 0.59/2.1명 = 28%의 시장이 점점 사라져 감

1. 일본 경제 침체의 원인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 일본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경기호황 누리다가 1992년부터 시작된 자산버블 붕괴와 함께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 5%대에서, 1990년대 1%대, 2000년대에는 0%대로 급격히 낮아짐. 흔히 '잃어버린 20년' 이라고 말하지만 본 서에서는 향후에도 '잃어버릴 20년'이 될 것임.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 일본

2. 일본 경제 침체의 핵심

일본 인구 추이



- 일본 언론의 2016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이날 발표한 '국세(國勢)조사' 결과 일본 인구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0.7%인 94만7,345명이 줄어 2015년 10월 1일 기준으로 1억2,711만47명으로 집계됨.

- 이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에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기 때문임.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 일본

3. 타마키 타다시

일본의 '위기만성화' 상황에서 익숙해져 버린 '10가지 착각'

1. 경제정체는 일시적이라는 생각
2. 과거의 성공과 경험의 법칙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생각
3. 누군가 다른 사람이 위기를 타개해 줄 것이라는 생각
4. 누군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생각
5. 자신의 회사만큼은 관찮을 것이라는 생각
6. 자신의 세대까지는 관찮을 것이라는 생각
7. 좋은 상품만 만들면 팔릴 것이라는 생각
8. 고령화 사회는 '먼 미래' 라는 생각
9. 그래도 '일본은 특별하다' 라는 생각
10. 나는 남에 비해 상황이 '낫다' 라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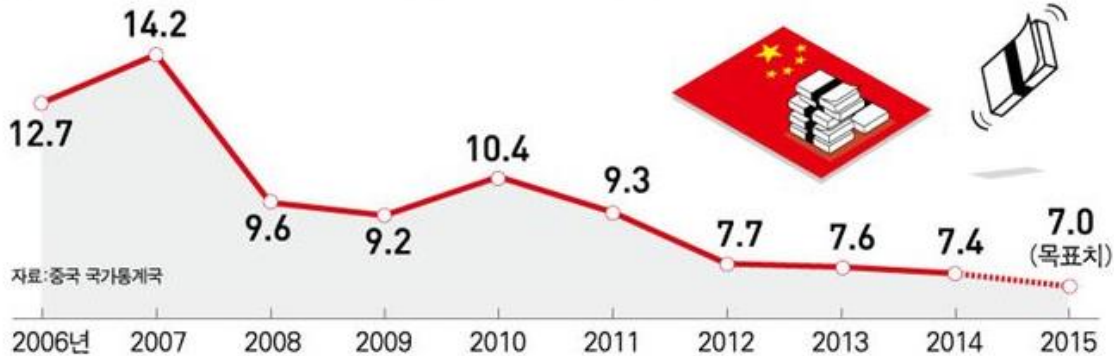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 중국

기존인구 대체 합계출산율 : 2.1명 - 생산가능인구 축소시점 출산율 : 1.50 = 0.60 : $0.60/2.1=28.6\%$ 의 시장이 점점 사라져감

1. 중국 경제 침체의 원인

중국경제 성장을 추이

중국의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단위:%, 전년 대비)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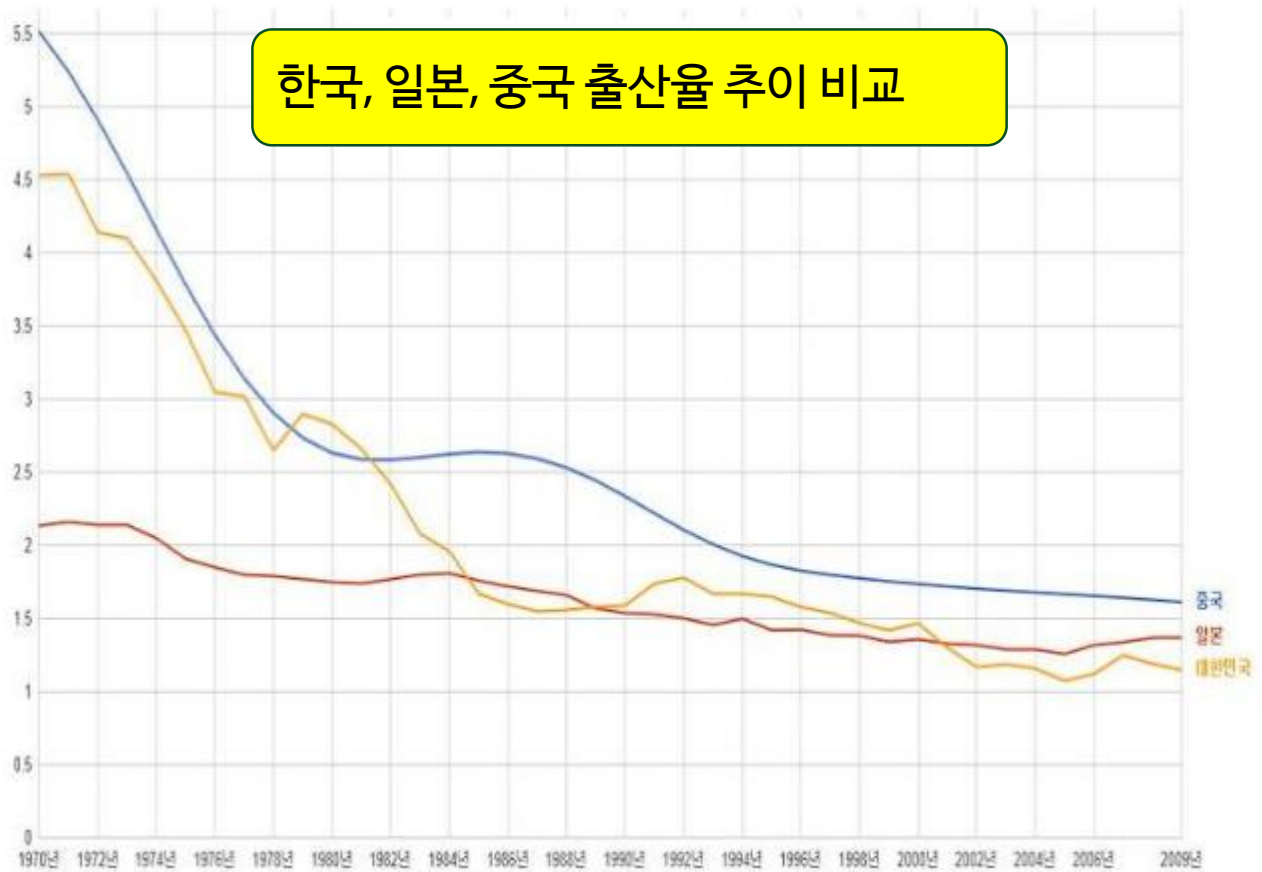
2. 중국 경제 침체의 핵심

중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http://m.blog.daum.net/kimuks/7533494>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 한국, 일본,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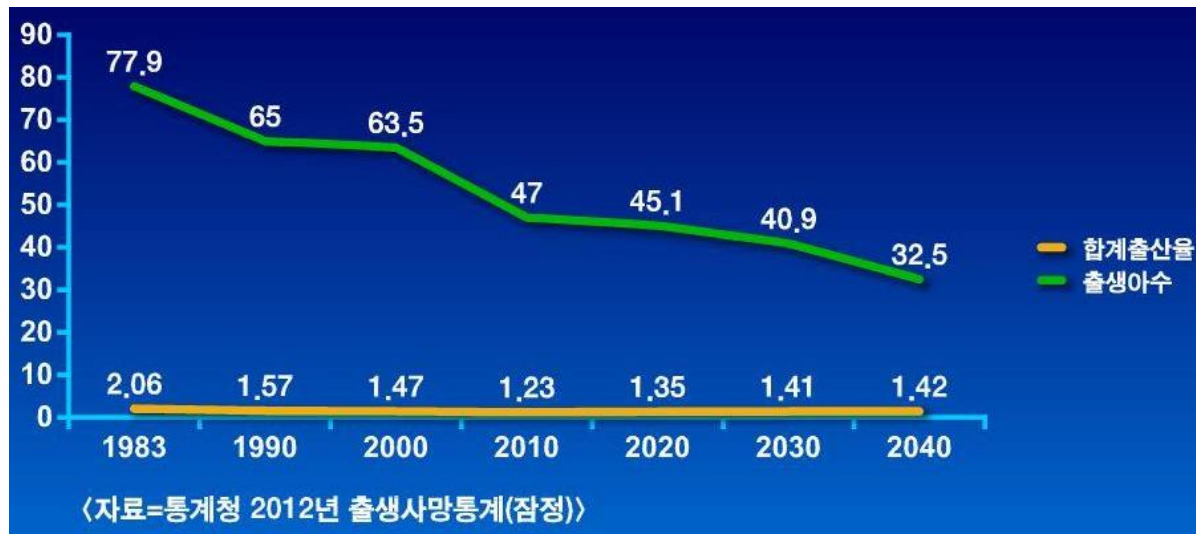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 한국

기존인구대체합계출산율 : 2.1명 - 생산가능인구 축소시점 출산율 1.24명 = 0.86 : 41%의 시장이 점점 사라짐

1. 한국경제침체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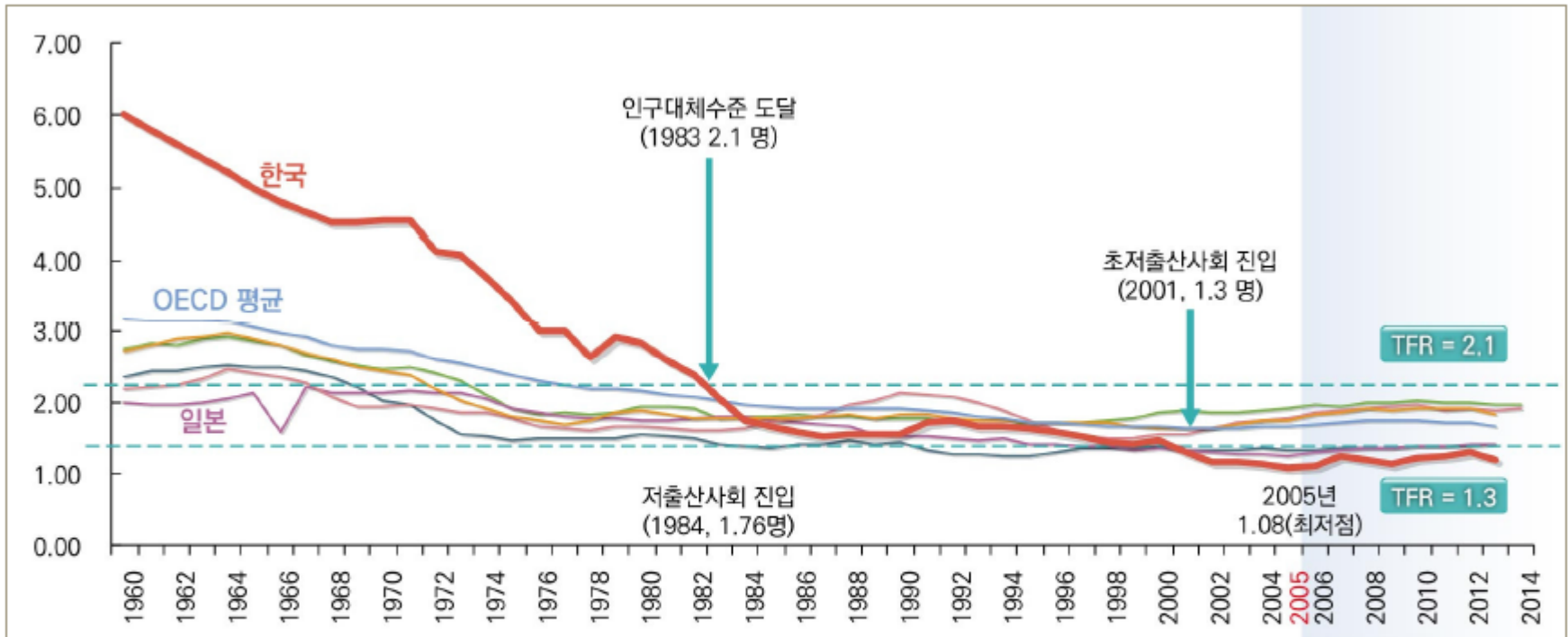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단위: 명)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 한국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OECD Family Databas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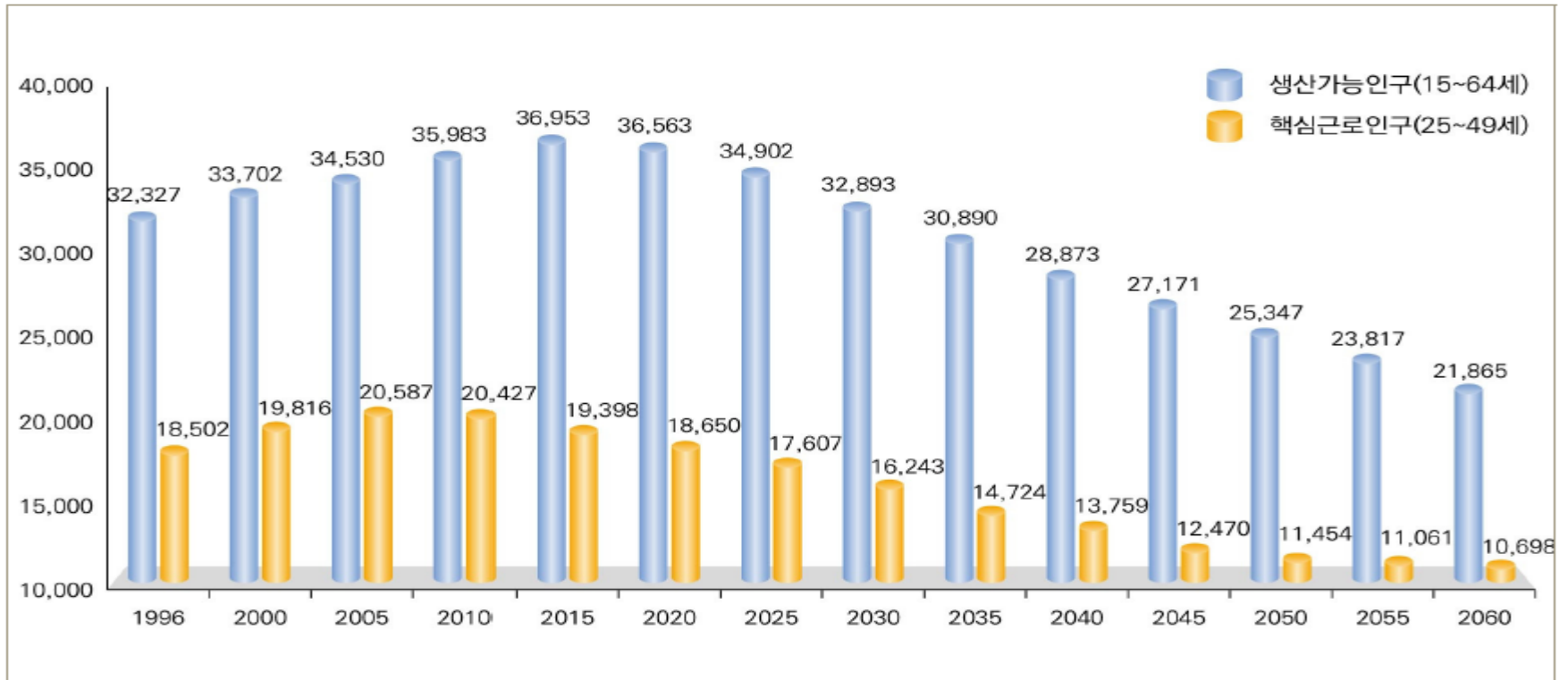
* OECD에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국가는 11개국(한국 포함)이나,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저출산현상 탈피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 한국

2. 한국경제 침체의 핵심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의 장래 추계 인구〉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 한국

3. 정부 대응의 실패

◇ 10년간 80조 쓴 저출산 대책 계속 '불임'

- 정부는 이 같은 인구오너스 시대에 대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참여정부는 2004년 4대 분야별 20개 핵심 과제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발표.
- 이후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5개년 계획에는 출산과 양육은 물론 고용, 주택,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년 다양한 분야 정책이 총망라되고 있음.
- 교육·보육비 지원에 중점을 맞춘 1차 계획은 0~4세 아동을 키우는 중산층까지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았음.
- 2차 계획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조건을 확대하는 등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늘렸음.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시행한 사업자에게도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음.
- 2017년부터 시작한 3차 계획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려 조성하고 자녀 셋 이상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을 담았음.
- 정부가 이런 저출산 대책에 쏟은 예산은 10년간 80조원, 고령화 대책까지 합하면 150조원에 이룸.
-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10년이 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노인 부양률도 매년 증가 일로를 걷는 등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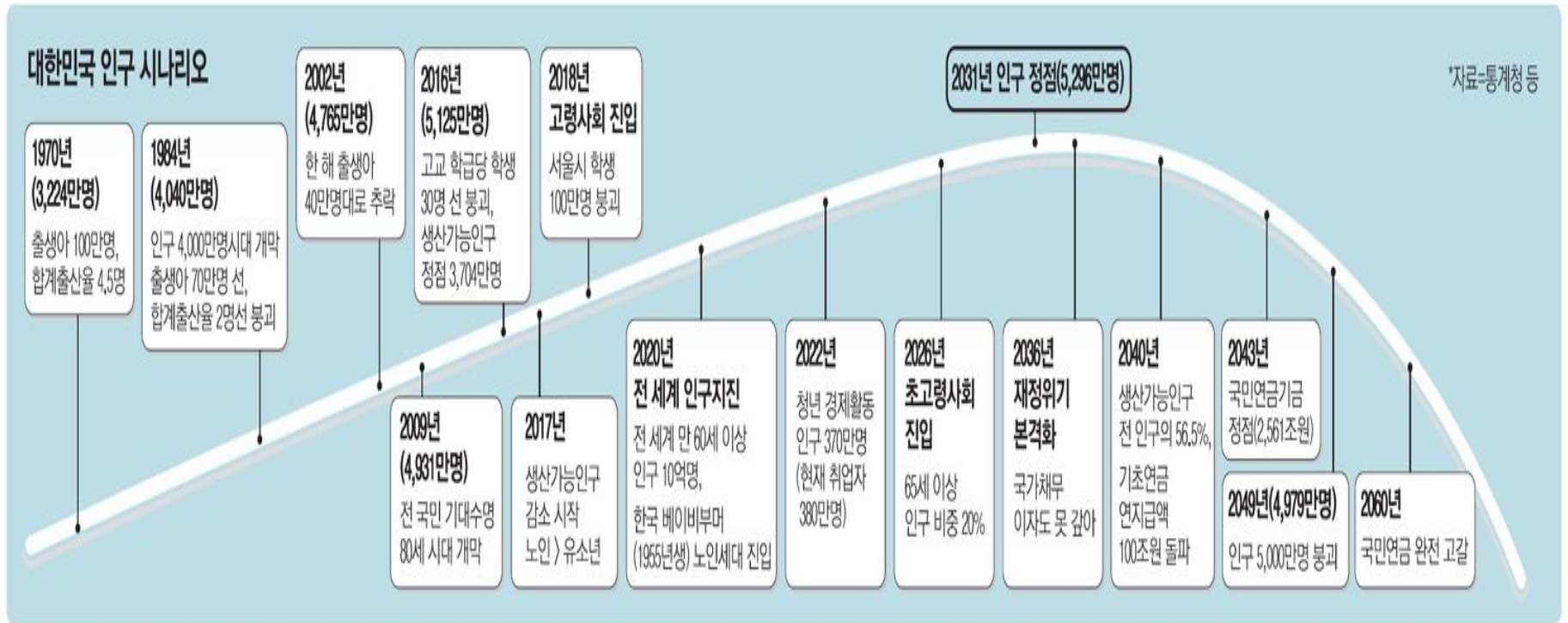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들여다보니

- 상설 사무국 없이 복지부가 사무국 역할 대행
- 소속 격하·격상 등 대통령 의지에 운영 좌우
- 전체회의 12년간 21번만 열려
- 대통령 주재 회의 3회(2013년 1회, 2015년 2회)
- 작년 출생아수 최저(40만6300명) 인구절벽 심화

중앙일보 2017년 3월 7일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 한국

3. 정부 대응의 실패



매경 2017년 2월 28일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 미국

기존 인구 대체 합계출산율: 2.1명 - 미국의 지난 20년간 평균출산율: 1.93 = -0.17명은 이민으로 채워 축소가 미미함.

1. 미국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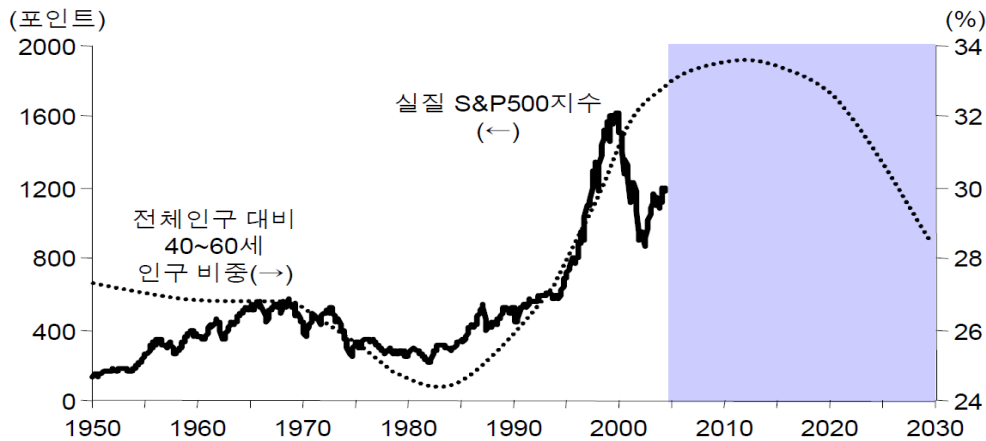
-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2016년 미국 경기 점검에서 미국의 가계 부문은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기 회복세 지속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여전히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가계재무 여건 개선세 및 소득 증가세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양적 완화가 진행되던 2014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민간소비는 양적 완화가 종료된 2014년말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고 분석
- 그러나 여전히 2%대의 증가율을 보임 :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4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상환 비율은 사상 최저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고용은 양적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 : 공식실업율은 완전고용을 의미하는 5%이하로 하락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와 경제: 미국

2. 미국 경제 안정의 핵심



미국 인구구조와 주가간의 관계



자료: Poterba(2004), p.47 Figure 3 을 바탕으로 다시 그림.

우리가 버려야 할 착각

(1) 경제성장이야 말로 해결책이라는 주장

- 경제성장율을 경제회복의 목표로 삼은 일본은 첫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전혀 멈추지 않았고, 둘째, 생산가능인구들의 세대 소득증가도 일어나지 않았고, 셋째, 개인소비 총액도 실제 늘어나지 않았음.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 우리보다 20년 앞선 반면교사인 일본이 있는데도 우리 경제침체 극복방안은 오로지 '경제성장이 우선'이라고 모두가 주장. 왜 이렇는가?
- 그것은 '경제성장율 우선'이라는 것이 지난 팽창경제시대의 선동·선전구호로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임.
- 정부는 경제성장율을 떨어 뜨려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공적 투자 수준을 유지 하거나 확대를 주장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 국채발행이 어렵다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1200조가 넘는 가계대출 속에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금융비용만 더 늘어가는 가계에서 어떻게 세금을 더 걷겠는가? → 공적 투자는 지금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최소 경제성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님. →

지금은 축소의 묘책을 갈구할 때임.

우리가 버려야 할 착각

(2) 내수확대가 경기회복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

- 정부가 2016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내수회복에 총력 : 기획재정부는 '16년 1분기 재정집행 수준을 전년 대비 8조원 확대/ 공공기관 투자는 6조원, 연·기금 대체 투자도 10조원 늘림.
- 가계소비를 늘리기 위해 주택·농지연금 확대 : 대출을 끼고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일시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대출한도 기준)로 올리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내는 초기 보증료율을 낮추는 동시에 연보증료를 일부 조정해 초기 보증료 부담을 덜어줌.
- 그런데 과연 이걸 타당한 일일까? 주택연금은 사실 'N포 세대'에게 '상속기대포기'를 만듦. 'N포 세대'들이 상속이라도 받아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
- 정부의 대책에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인 '생산가능인구축소=소비시장축소'에 대한 진단은 어디에도 없음 : 위의 정책을 추진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한가지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것만으로 우리나라의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임.
- 정부의 정책들은 어떻게 하면 가계더러 더 빚을 내게 해서 소비를 하게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음 : 이미 가계는 빚을 폭음하여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또 빚을 내라고 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버려야 할 착각

(3) 소비촉진정책을 통한 데모-디플레이션 퇴치?

- 정부가 2016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재정을 조- 저성장 경제 축소의 경제에서 또 하나의 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소비촉진정책을 통한 저성장 퇴치' ;
-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의 심화로 소득이 일부 부유층의 저축으로 축적되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빚 감당하기에 소비할 돈이 없음.
- 그 원인은 바로 인구축소 : 인구가 없는데 어찌 소비과열이 일어나서 정부나 가게가 물가걱정을 하겠는가?
- 이런 상황에서 2014년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대책이라는 것이 '빚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 소비하라'였음.
-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생산가능인구감소→구조적인 공급과잉→상품 서비스의 단가 저하→고용 축소'라는 순환은 계속.
-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 화폐공급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교과서적으로 말해도 설득력은 없음. 일본이 실제적인 제로 금리상태가 된 지 10년.
- 경기가 나빴던 시기는 제외하더라도 '전후 최장의 호경기'라던 2002~2007년에도, 심지어 그 안에서도 개인소득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한 2004~2007년에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우리가 버려야 할 착각

(4) 제조기술 혁신만이 살길이다?

- 정부나 기업들은 많은 R&D 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을 한다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음.
- 제조업만 되살아 난다면 우리 경제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것 : 적어도 시장팽창의 시대에는 맞는 말
- 인구축소로 인한 시장축소의 상황에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신념 : 제조기술을 끊임 없이 혁신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상 세계의 최첨단에 선다고 하여도 '생산가능인구축소 = 소비시장축소'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음.
- 첨단 기술로 무장한 우리의 제품이 수출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만들어 내지는 못함 : 축소된 시장에서 조금의 분할만 가져 올 것임.
- 일본의 2002~2007년 수출 호황기의 결과 기업만 부를 축적하고, 또 다시 내수는 경기 침체 : 수출이 잘 된다고 생산가능인구가 직접적으로 늘어 나가거나 일본 내 시장축소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
- 시장축소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몇몇 기업들의 혁신(예컨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등)으로 수출이 늘어나도-사실 삼성전자의 수출로 인한 경제효과 착시도 만만치 않음-아랫목을 데우지 못함.
- 아랫목은 이미 인구축소가 시장의 축소로 전이되어 냉기는 점점 퍼져가고 있을 뿐임.

우리가 버려야 할 착각

(5) 외국노동자 수용으로 극복하자?

- 핵심근로인구가 2010-2015년 84만명, 2015-2020년, 75만명, 2020-2030년, 241만명, 2030-2040년, 248만명, 2040-2050년, 231만명, 그리고 2050-2060년, 75만명이 감소 : 외국인노동자 수용정책으로는 해결 불능.
- 물론 이를 병행하여 추진해야하는 것은 당연 : 그러나 이것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의미
- 이들이 우리 경제시스템에 쉽게 녹아 들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열악한 복지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함 : 일본과 우리나라가 향후 외국인 노동자 쟁탈전을 벌일지도 모름.

(6) 통일로 인구축소를 막자?

북한인구구조추이*

구분	인구	출산율	노인인구비율	기대수명	출생아사망	산모사망
1993년	2,120만명	2.1명	5.4%	72.7세	14명	54명
2003년	2,490만명	2.0명	9.0%	69.0세	19명	77명

* 출생아 사망은 인구 천명당이며, 산사망은 출산 10만건당 기준

문제해결 방법

정부의 할 일

(1) BRIDGE PLAN 2020을 반드시 초과 달성하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체계도



정부의 할 일

(1) BRIDGE PLAN 2020을 반드시 초과 달성하자

2 | 자원 조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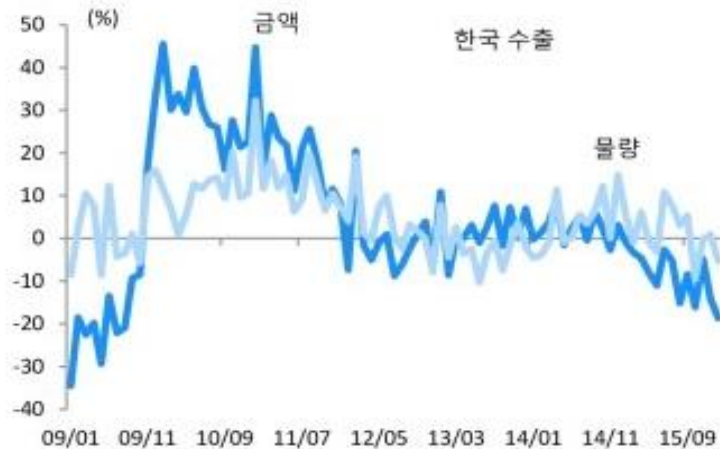
- »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매년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
 - 기존 지출 구조조정,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자원 마련
 - 세출 구조조정, 기존사업 지출 효율화 추진
-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자원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장기적 투자 필요성 및 자원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지속 추진
 -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자원조달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추진

정부의 할 일

(2) 국가차원의 다운사이징

수출증감율과 지역별 추이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 1월 수출 증감률



자료: 산자부, 관세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역 대부분에서 수출 부진이 심화



자료: 산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문제해결 방법

기업의 할 일

(1) 혁명적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라.



도요타車 재택근무 개요	대상	사무직과 기술직(근속연수 5년차 이상)
	인원	2만5000명(본사 직원의 3분의 1 규모)
	시기	2016년 8월부터
	방식	집에서 업무(주 1회 2시간만 사무실 출근) 남성 육아참여 촉진
	효과	여성 우수인력 확보 노인 간병 이직 최소화
확산되는 日기업들의 재택근무 <small>*자료=닛케이</small>	혼다	월 근무시간 25% 이내 실시(육아·간병 차원)
	미쓰이물산	직장상사 허가 시 가능(전 직원 대상)
	리코	종일·새벽·심야근무 선택(육아·간병 차원)
	일본타바코산업	주 2일 이내(본사 직원 시험도입 중)
	일본MS	최대 주 5일 원격 텔레워크(전 직원 대상)

사회의 할 일

(1) '한국형 백만장자세'를 도입하자

OECD 주요 회원국 빈부격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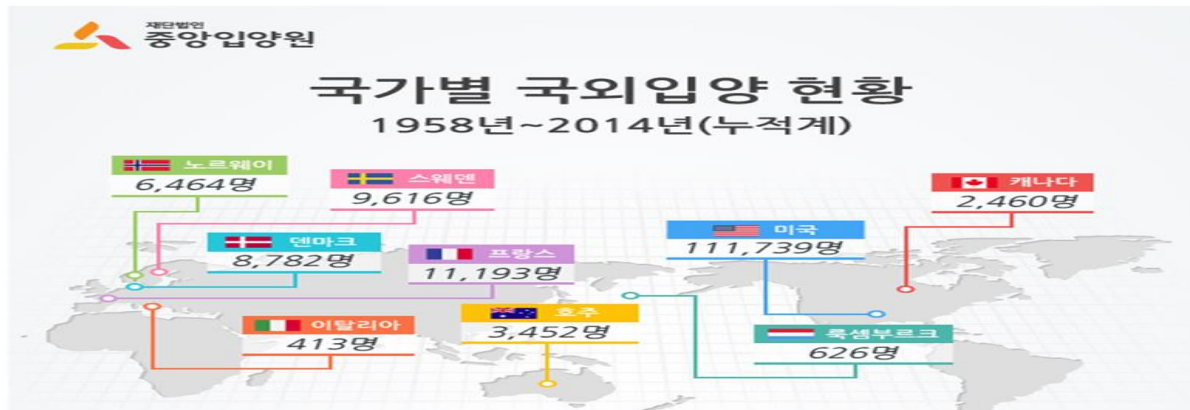
- 빈부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저출산 혁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만장자세 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캠페인 전개
- 백만장자세 도입은 사회공헌 차원의 영역이고, 이렇게 공헌된 재원은 저출산 타계에만 사용되도록 함
- 일종의 '국가적 출산 돕기 캠페인': 백만장자세는 무조건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이 아님.
- 자발적 참여가 될 수 있는 국가공익차원의 분위기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헌하게 하는 것.
- 미국처럼 '상위1%부자증세(공헌)'를 만들고 이 세제를 [저출산 혁파 기여 세금]이라고 명명하고 저출산 극 복에만 사용되게 함으로써 증세된 상위 1%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높여 주자는 것임.
-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론이나 학계나 사회 명망가들이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를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필요.

문제해결 방법

사회의 할 일

(2) 비혼모를 적극 지원하자

국가별 국외입양 현황



연도별 국외입양 현황 (2014년 기준 주요 9개 국가 총 154,745명)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1958 ~ 2009	109,072	11,173	8,723	9,381	6,335	3,393	2,248	387	578
2010	775	6	21	74	43	18	60	4	12
2011	707	4	16	60	33	21	54	6	15
2012	592	4	10	49	26	13	45	7	9
2013	181	2	5	19	7	-	15	4	3
2014	412	4	7	33	20	7	38	5	9
계	111,739	11,193	8,782	9,616	6,464	3,452	2,460	413	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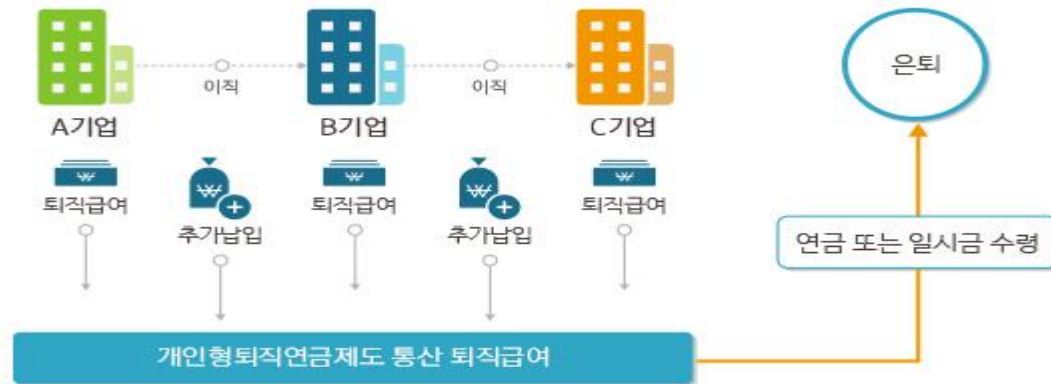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문제해결 방법

개인의 할 일

(1)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여 자산을 늘려라

IRP의 구조와 자격조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가입 대상

퇴직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추가부담금 납부의무자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의 근로자
-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개인의 할 일

(1)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여 자산을 늘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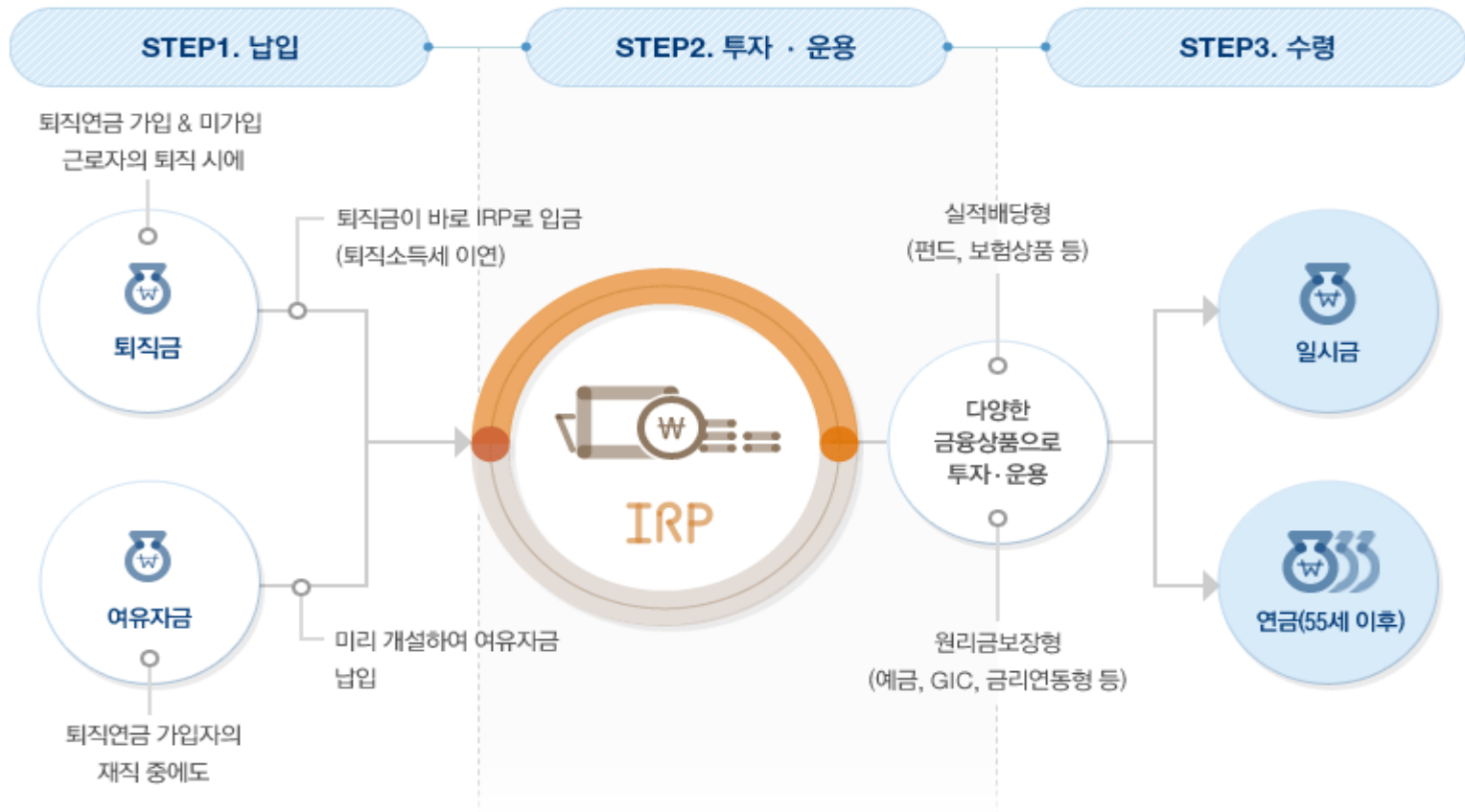
<개인연금저축 vs 개인형 퇴직연금 비교하기>

구분	개인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기존 퇴직연금가입자로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고자 하는 자
세액공제한도	연간 400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세제적격)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400만원한도 + 퇴직연금 300만원한도)
해지가산세	2.2%	없음
의무납입기간	최고 5년이상 유지	의무 유지기간 없음
납입한도금액	없음	연간 1,200만원
보험계약대출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연금수령방법	5년이상 유지 후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입기간 관계없이 55세 이후부터 연금 및 일시금으로 수령가능
사업비	10~30% 회사 및 상품에 따라 다름	0.45%
기타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입 가능

문제해결 방법

개인의 할 일

(1)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여 자산을 늘려라



개인의 할 일

(1)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여 자산을 늘려라

IRP 가입 시 장점



○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원(퇴직연금(DC/IRP) 및 연금저축 합산 4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DC/IRP) 3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지방소득세 1.2% 포함))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1.5%포함)]

받은 퇴직금을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세액이던 되므로 전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가입하여 불릴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을 받아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유리합니다.



○ 전문가가 골라준 우수한 금융상품 + 편리한 투자!

IRP 가입으로 다양한 금융회사의 모든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펀드, 예금, 보험 등)을 IRP에서 한번에 운용가능 하고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수한 금융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개인에게 적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보다 저렴한 운용보수로 더 유리합니다.



○ 노후에 고박고박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통해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막고,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여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겠지요?

중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집중연금, 100세 연금 등 개인의 노후계획에 맞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할 일

(2)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를 극복하자



▲ 케이블TV에 등장하는 대출 광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빌릴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청자의 판단력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숨어 있다.

조선비즈, 2016년 3월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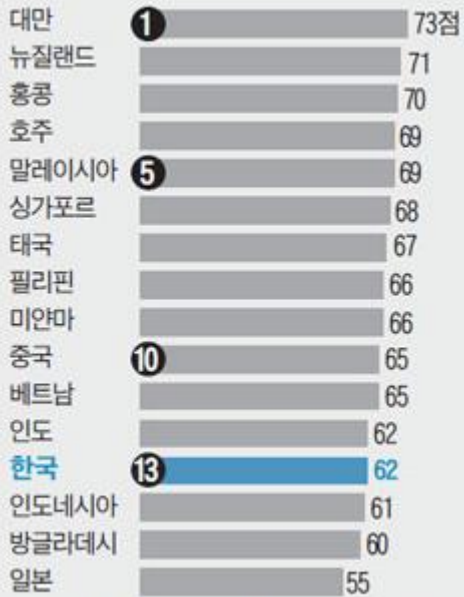
▲ 서울 신정네거리역 길바닥에 12일 대출 광고 명함들이 떨어져 있다. 본지 기자가 마음에 눈을 떠 옮긴채 두 시간 동안에만 거리에서 마주친 대부업 대출 광고와 개인 회생, 파산 면책 광고가 무려 200여건에 달했다. 무분별한 대출 광고가 걸개를 쳐도 이를 막을 만한 법적 규제가 없다. /성형주 기자

조선비즈, 2015년 3월13일

개인의 할 일

(2)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을 극복하자

亞·太 16개국 금융 이해도 순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자료: 마스터카드

적금 유지하려 현금서비스, 20% 금리 쉽게 본 마이너스 대출, 믿고 건네준 인감도장...
“별생각 없이...” 멀쩡한 人生 망친 치명적인 선택

위기에 빠진 한국 가계 경제

부채는 많고

(단위: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저축률은 낮고

(단위: %,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저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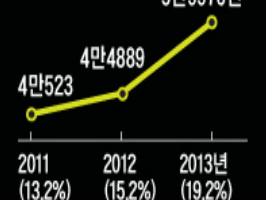


자료: OECD(2012년)

경제생활 문제에 따른 자살자수



범죄로 얻은 금전을 생활비로 쓴 건수



※괄호 안은 전체 자살자·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경찰청

그래픽=김성규 기자

결론

저출산(2001-1016년 평균 합계출산율 1.2명)→

핵심생산가능인구 축소(2008년)→

생산가능인구 축소(2016년) →

국내 소비시장축소(2016년 경제성장률 2%대 고착화)→

‘N포 세대’의 확산 →

‘1.2명의 공포세대’ 생산가능인구 진입→

급격한 시장 축소 →

국가존망의 위기

한국이 직면한 5가지 국가실패 징후

- 갈등 조장하는 비포용적 정치체제
- 김영란법 등 무분별한 포퓰리즘 입법
- 구조조정 실패 등 산업 경쟁력 추락
- 문제해결 못하면서 국민 부담만 늘리는 정부
- 인구절벽 대비 못한 저출산 정책

한국병 국가 몰락 경로

비포용적 정치·경제 제도



성장정체·양극화



정치불안·경제후퇴



국가 몰락

매일경제 2017년 2월 26일

1

감사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극복될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